

여도 야도 밀리면 치명상...점점 더 거세지는 '조국 정국'

양보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일정 합의도 '난항' 거듭

증인·참고인, 87명 신청 한국당 vs "가족은 안 된다" 민주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심상치 않다. 진영간 대결구도로 흘러버린 조국 청문회의 행방으로 향후 정국이 판가름 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모두 조국 청문회에서 밀리면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진 채 조금의 양보도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는 전날(26일) 우여곡절 끝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합의했지만, 최종적인 일정 합의에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3일 실시할 경우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기에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분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가 법정시한을 넘어가는 것)이라서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양해가 선행돼야 하고 그런 것 없이 국회에서 시한을 넘겨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청문회 일정 조율 주장이 거세지만 한국당은 재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반복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으며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들간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으면 국회법상 효력이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 못하는 것은 결국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뿐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겠다면서 87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송기현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협의를 벌였지만 이견만을 확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로구 현대직선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송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의견차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80명 이상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내 TF회의에서 "청문위원들로부터 취합한 증인 숫자가 80명이 넘는다"며 "하나같이 제기된 의혹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 임시의혹을

비롯해 옹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을 해소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데 조 후보자의 장남과 장녀, 배우자, 모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으로 절대 채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증인·참고인 협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송 의원은 "가족에 대해 청문회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고 더욱 격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증인·참고인을 다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후보자 딸과 어머니를 불러서 뭘 하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모욕을 주는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게이트의 흉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기피해 보이기에 저희가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손학규, TF 구성해 '손학규 선언' 추진 박차

총선기획단 의결 난항에 우회...하태경 징계 여부 시간 끌기도 퇴진파 "당헌·당규 위반"...윤리위 문제도 공정성 상실 지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손학규 선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지난 26일 8·20 당대표 선언 이행 TF를 구성했다. 총선기획단 설치 이전 기초조사 등 준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TF 팀장으로는 이수봉 인천계 양갑 지역위원장이, 위원으로는 △고

연호 서울은평을 지역위원장 △류관선 바른미래연구원 전략기획TF 자문위원 △원성목 바른미래연구원 전략기획TF 자문위원 △유길종 인천서구갑 지역위원장 △윤성웅 바른미래연구원 전략기획TF 자문위원이 임명됐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20일 '손학규 선언'을 통해 총선기획단 설치·인재개발위원회 가동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헌·당규에 따르면 두

기관의 설치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퇴진파 인사들이 최고위 구성에서 한 명 더 우세해 표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 대표의 이번 TF 설치에 이같은 당내 상황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TF 구성은 최고위 정족수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두는 것이라 주장도 나온다.

현재 당의 윤리위는 퇴진파 하태경 최고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을 두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윤리위 결과가 중장계가 나오면 하 최고위원은 당직을 상실하거나 직무정지될 수 있다. 그럼 최고위 구성이 당권파와 퇴진파가 동수가 되고, 당헌당규에 따라 손 대표가 의결권한을 가져간다.

다만 퇴진파 측에서는 당대표 선언 이행 TF 역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당 대표 직속으로 기구를 두려면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더라도, 위원 구성은 최고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하려면 당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기획단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헌·당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당 대표 직속 TF를 만드는 것은 짚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윤석열, 진정한 칼잡이인지 지켜보겠다"

"청문회 합의한 사람들만 '쪼다' 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대 비롯해 옹동학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코링크PE 및 웰스 씨앤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진정한 칼잡이인지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이 칼을 뱉다. 너희들이 검사인지 샐러리맨인지 판명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마 면죄부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사 정신이 살아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 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사람들만 '쪼다'가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1

대안정치, 국회 '비교섭단체' 등록 신청...인정시 첫 사례

민주평화당 탈당파 모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국회 사무처에 비교섭단체 등록을 정식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안정치 창당준비위원회의 황인철 조직간사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비교섭단체 등록과 관련한 대안정치 소속 의원 9명의 연서와 날인 서류, 관련 정관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류를 제출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인 장정숙 의원을 제외한 유성환·윤영일·김종희·정인화·이용주 의원이다.

대안정치는 지난 16일 평화당을 탈

당한 이후 국회 비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해 왔으나 국회법이 이를 명시하지 않아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국회법은 오직 20명 이상의 현역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소속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20명 미만 무소속 의원들의 결사체를 비교섭단체로 인정한 선례가 없다.

이와 관련해 황 간사는 "국회법이 무소속 현역의원 20인 이상을 교섭단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거꾸로 (적용하면) 20인 미만 무소속 의원 모임을 비교섭단체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비교섭단체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신고절차에 준하는 의원들의 연서와 날인 서류 등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종 결정권자는 국회의장"이라며 "국회의장 및 사무총장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대안정치가 비교섭단체로 활동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만큼 그에 준하는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가 등록을 마칠 경우 창당 이전에 20인 미만 결사체로서 비교섭단체로 인정 받은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 △초월회 참여 여부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사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